

청년고용(I): 경기변동과의 관계와 정책적 함의

-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관계는 경기역행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, 이례적으로 2005년 즈음 경기 후퇴-저점을 경험한 청년집단은 진학, 취업 준비, 실망노동자 등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. 이는 경기상태에 따른 청년의 취업에 대한 기대(expectation)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.
- 문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청년집단의 인적자본 축적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가중될 수 있음.
-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 유효한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도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경기와 청년집단의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, 그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임.

| 주 |

이 글은 “정지운 외(2018), 『인구절벽과 청년고용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정리하여 작성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청년고용, 즉, 청년의 취업과 실업,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함.

- 최근 청년고용에 문제가 있으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. 하지만, 청년고용이 개선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.
- 이에 청년고용과 경기변동의 관계를 파악하여, 경기변동이 청년집단의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함.
- 경기변동과 실업과 관련한 실증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실업과 취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사하나, 경기변동에 따라 상이한 의미와 직관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음(남재량 외 3인, 2011).
 - 경기변동과 실업으로의 유입(flow into unemployment)과는 무관하다는, 즉, 실업으로부터의 유출이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견해(Shimer, 2005a, Shimer, 2005b)
 - 반면에 경기변동 상 불황 시 실업으로의 유입이 많고, 호황 시 유입이 적다는 견해로써 주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초기 연구에서 발견(Darby, Haltiwanger, and Plant, 198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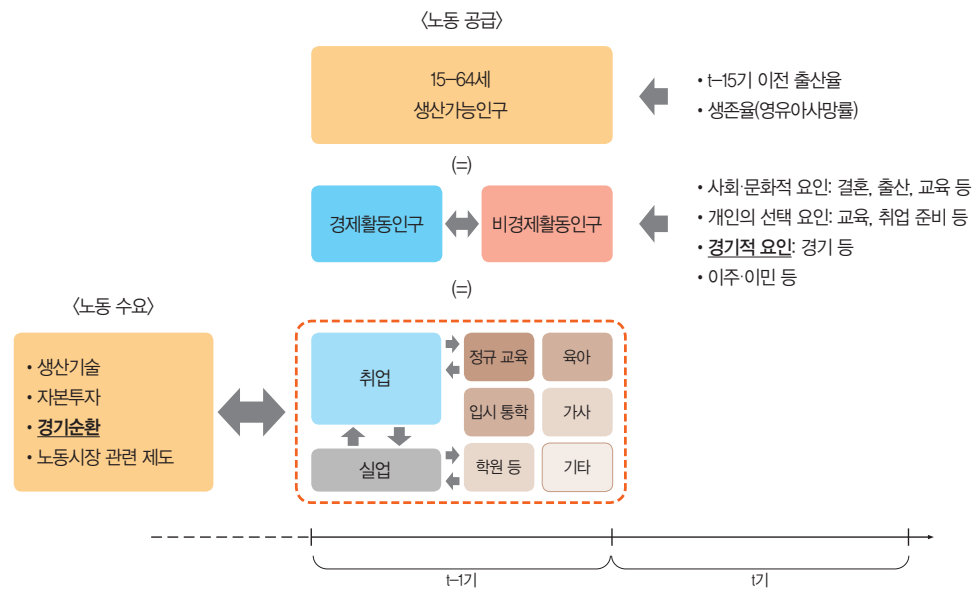
| 분석 자료: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및 한국은행의 「국민계정」

-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1970-2018년 자료의 15-64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상태 정보 및 한국은행의 「국민계정」 1970-2018년 자료의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정보를 활용



분석 자료: ① 경기변동과 실업자(취업자) 증감, ②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규모와 주기성(cyclicity)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실시

- 15~29세 청년집단의 경제활동상태 변동과 함께 청년집단이 아닌 30~64세의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하고, 주요 현상과 기존연구들에서 도출한 경험적 사실들을 확인
- 다만 취업·실업의 규모(비율)와 같은 노동시장 상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([그림 1] 참조).
 - 노동 수요는 경기변동 뿐 아니라 생산기술, 자본투자, 그리고 노동시장 관련 제도 등에 영향을 받음.
 - 노동 공급은 출생·사망 뿐 아니라 사회·문화적 요인, 개인의 선택 요인, 경기적 요인, 이주·이민 등에 영향을 받음.



[그림 1] 노동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로써 취업·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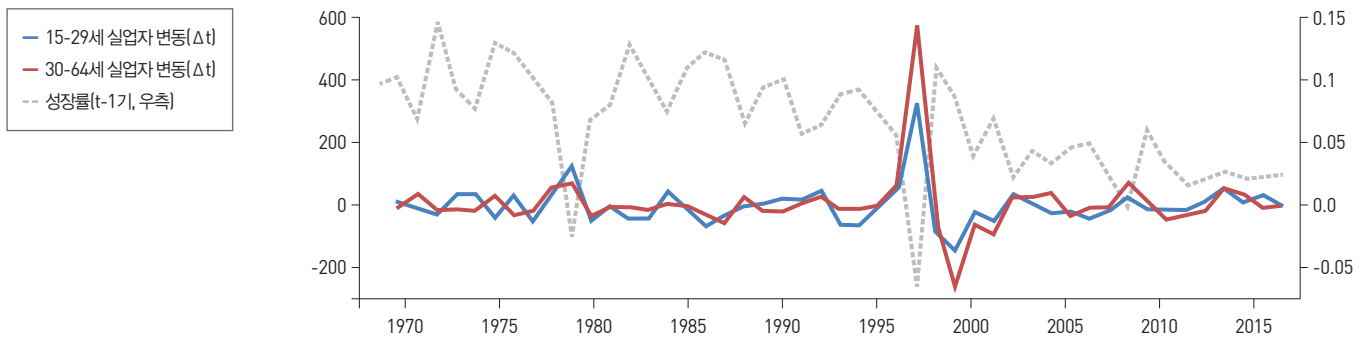
02 경기변동과 취업·실업의 증감

현상 1: 경기 침체 시 15~29세 청년집단과 30~64세 비청년집단의 '실업자 증가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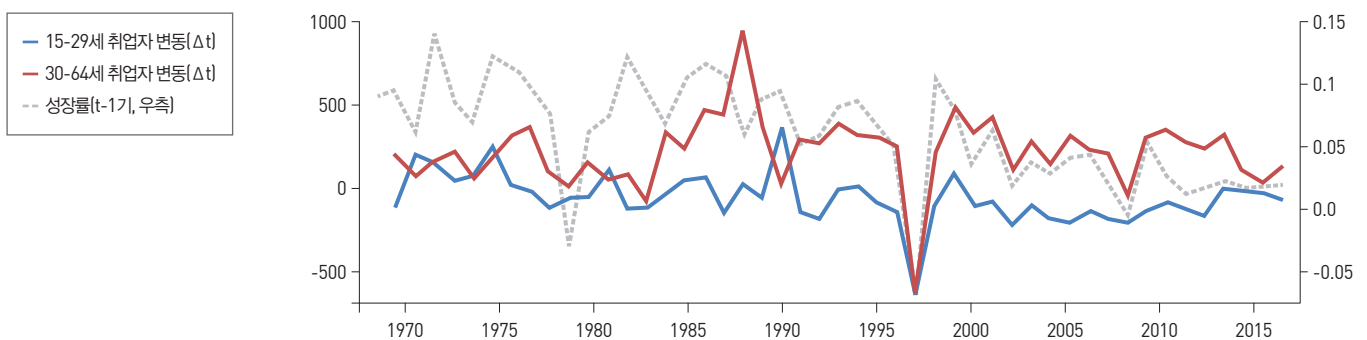
- [그림 2]에서 볼 수 있듯이, 경기변동 상(점선)에서 15~29세 청년집단과 30~64세 비청년집단의 실업자 증감 양상(패턴)은 공통적으로 경기 역행적(counter-cyclical)임.
- 청년집단의 실업자 증가 규모(진폭)는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시점을 제외할 경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.
 - 이때 실업자 증가 규모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. 예를 들어, 실업자의 변동성이 일정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감소할 경우 실업률은 증가하게 됨.
-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 시 청년집단의 실업자 증가 규모가 비청년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.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청년집단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상대적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.

현상 2: 경기 침체 시 15~29세 청년집단과 30~64세 비청년집단의 '취업자 감소'

- [그림 3]은 경기변동 상에서 청년집단과 비청년집단의 취업자 증감 양상을 비교한 결과로, 두 집단의 취업 양상은 공통적으로 경기 동행적(pro-cyclical)이나 그 규모는 상이함.
- 청년집단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,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취업자 증가 규모는 음수로 나타남.



[그림 2] 경기변동과 실업자 증감



[그림 3] 경기변동과 취업자 증감

03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

| 현상 3: 경기 침체 시 15~29세 청년집단과 30~64세 비청년집단의 ‘비경제활동인구 증가’

- [그림 4]는 경기후퇴·침체 국면에서 청년집단과 비청년집단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양상을 비교한 결과로, 두 집단의 비경제활동인구 양상은 공통적으로 경기 역행적(counter-cyclical)이나 그 규모는 상이함.
- 주목할 점은 청년집단은 비청년집단보다 경기가 후퇴·저점(1999~2003년)을 지나고 회복되는 시기(2004~2009년)에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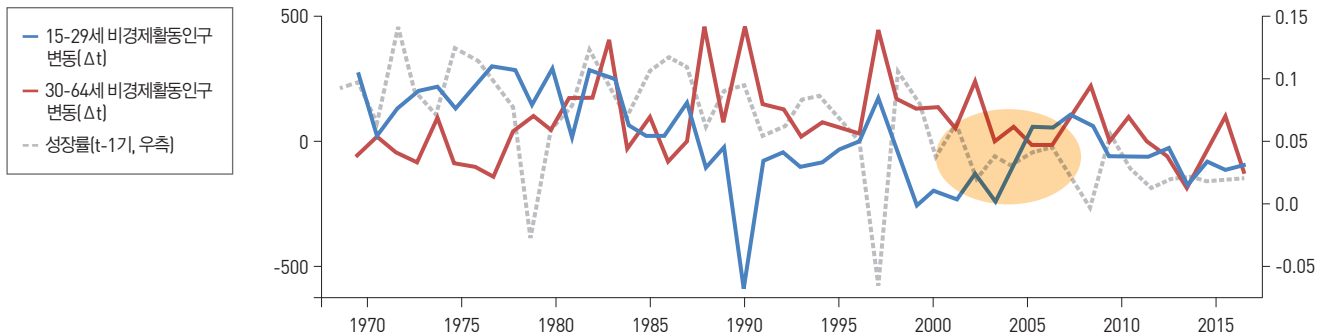
| 현상 4: 경기 침체 시 15~29세 청년집단과 30~64세 비청년집단의 ‘경제활동인구 감소’

- [그림 5]에서 볼 수 있듯이, 경기후퇴·침체 국면에서 청년집단과 비청년집단의 경제활동인구 증감 양상은 공통적으로 경기 동행적(pro-cyclical)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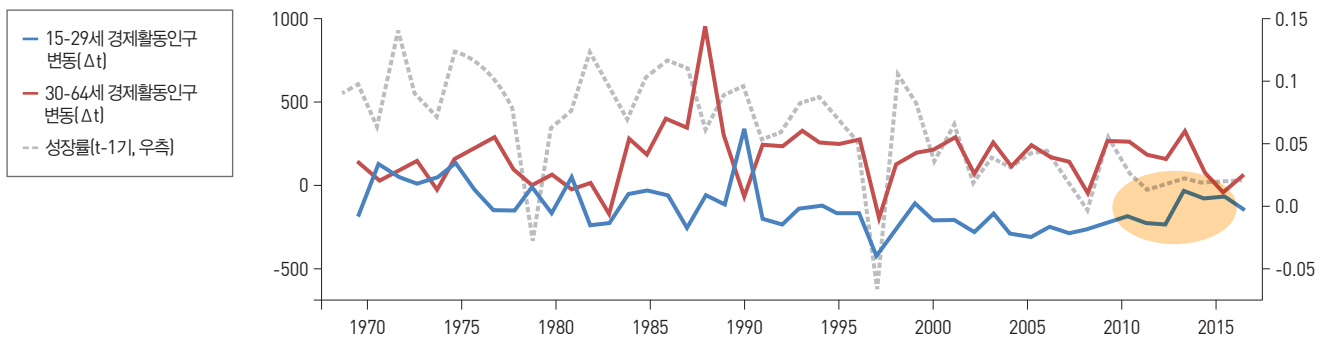
| 현상 5: 15~29세 청년집단은 경기 침체 시 취업도 실업도 아닌 대안적 상태를 선택

- 경기후퇴·침체 시 청년집단의 비경제활동인구(진학, 취업 준비, 실망노동자(discouraged worker) 등) 규모가 증가함.
- 특히 청년집단은 취업·실업과 같은 경제활동인구로 남을 것인가, 아니면 진학, 취업 준비 등 추가적인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할 것인가의 선택이 비청년집단에 비해 용이함.
- 이때 인적자본 축적 완료(졸업, 자격증 취득 등)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하며, 이는 일종의 마찰적 실업(frictional unemployment)과 유사한 성격

- 청년집단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 국면인 2004~2009년에 이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으며, 다년간의 시차(time lag)를 두고 2013~2014년에 경제활동인구가 절대적·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.
- 이는 2004~2009년 중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

[그림 4]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감



[그림 5] 경기변동과 경제활동인구 증감

04 시사점

- 청년의 경제활동 여부의 선택은 사전적으로 경기회복 전망과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에 근거하여 결정하지만, 사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집단 내 경쟁, 여타 연령집단과의 경쟁,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 미실현 등에 따른 사회·경제적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.
-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
 - 최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적절성 논쟁에도 불구하고, 청년집단이 직면한 고용문제의 심각성과 연쇄성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일자리 정책을 선별하여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큼.
 - 동시에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도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 중·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 역량(capacity)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임.
 - 현장에서는 청년집단의 동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, 그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됨.

정 지 윤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